

| 특집 | ❶

1950년대 전쟁, 빈곤, 독재를 넘어 희망을 키우다

허은

전쟁 - 대의의 공허함과 무너진 국가 권위

한국 현대사에서 1950년대만큼 암울하게 느껴지는 시기도 없을 것이다. 1950년대는 사실상 남북한의 개개인에게까지 엄청난 상처와 증오감을 남긴 전쟁을 치르고, 전쟁이 남긴 물적·인적 후유증에서 벗어나는데 전반기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북 분단국가의 수립은 분단정권의 수립을 반대했던 이들의 예견대로 결국 전쟁으로 치달았다. 이른바 무력통일을 외치며 벌인 '6·25 전쟁'은 곧 국제전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남북 분단이 미·소의 이해 추구하고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전개는 당연한 추이였다.

그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 할지라도 대량학살과 삶의 근

거를 파괴하는 전쟁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어떤 세력도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 정권이 개전 후 기대했던, 전쟁에 호응한 남한 인민들의 봉기는 없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한 북한이 짧은 점령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대중의 의식을 쉽사리 바꿀 수도 없었다.

한편, 전쟁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권력의 권위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다. 6월 27일 피난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된 비상 국무회의에서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은 안일한 자세를 보이다 결국 수도 천도만을 결정하고 회의를 종결시켰다.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의安危와 상관없이 새벽같이 대구로 떠나고 정부 요인들도 안이한 대응을 하는 상황에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라고 별반 다른 모습을 보일 리가 없었다. 국가권력의 권위는 권력을 장악한 지배집단의 도덕성이 붕괴되면서 땅에 떨어진 것이다.

이승만 정부는 9·28 서울수복 직후 서울을 사수한다는 정부의 보도를 믿다가 피난가지 못한 이들을 부역자로 분류하여 혹독하게 심사하고 처벌했다. 서울을 버리고 도피한 사실이 논란이 되어 국회까지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이승만 정부는 수도를 수복하자마자 오히려 잔류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며 다루었던 것이다. 여기에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대는 후방에서 게릴라 토벌작전을 벌이며 주민을 대량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거창·함양·산청 양민 집단학살은 대표적으로 드러난 몇몇 사례일 뿐이다. 결국 전쟁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국가 존재에 대한 강한 회의를 불러 일으켰고 따라서 이승만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자발적인 동의를 확보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안게 되었다.

미국은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고 피난민을 위해 긴급구호 물자를 지원했다. 또한 전선이 교착되자 다양한 재건사업을 지원했다. 이러한 제반 활동은 한국 사회에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시혜적인 존

허은 _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원, ph4548@empal.com

재로서의 위상을 한국 사회에 심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제반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가져갈 수는 없었다. 미·소 분할점령이 분단으로 이어지고 다시 한반도가 미·소가 주도하는 양 진영의 전쟁터가 된 상황에서 모든 한국인들이 미국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미국은 전쟁 기간 동안 전선과 후방에서 한국인의 대량 학살과 직·간접으로 깊은 연관을 맺었다. 물론 대다수 대중과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미국을 자유와 정의의 화신으로 여겼으나, 이 시기에 반공을 외친 지식인들 내에서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모두를 전쟁을 일으킨 원인으로 간주하며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이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여하튼 전선은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급격히 이동하며 남북한 대중의 삶을 짓이겨 놓았다. 이후 전선의 지루한 교착과 휴전회담의 난항은 수많은 청년들을 계속 죽음으로 내몰았다. 3년에 걸친 전쟁의 최종 피해자는 민중들이었다. 한국전쟁 동안에 있었던 인명 손실은 그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사망자가 민간인과 군인을 합쳐 약 40만 3천여 명에 달했고 납치, 포로, 실종 등, 강요 등을 통해 북으로 유출된 인구는 대략 55만 9천여 명이었다. 그리고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전쟁 기간 동안 월남한 남자의 수는 4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전쟁은 전쟁미망인, 고아, 전재민, 이산가족을 양산했다. 생존의 극한까지 몰린 전쟁미망인들과 전쟁고아들은 미군을 상대로 한 '유엔마담'이나 '슈샤인 보이' 를 직업으로 선택해 전시 하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갔다.

경제 - 원조 의존 경제와 빈곤의 악순환

1950년대는 한국 사회 변동의 중심이 농촌에서 점차 도시로 이동한 시기라 할 수 있다. 1960년 4·19 운동은 도시의 학생, 시민, 인텔리, 도시빈민 등의 주도 하에 전개되었고 이는 한국 사회 변동의 진원지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했음을 확연히 보여주었다.

전쟁 기간을 포함한 1949년에서 1955년 사이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인구는 약 72만 2천여 명이었다. 전쟁의 영향과 농업희생정책은 1950년대 내내 농촌인구의 꾸준한 감소와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여전히 1950년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계급은 농민이었다. 농민이 대략 65% 이상의 수준을 유지한 반면 이 시기 산업노동자는 5%에 불과했다. 1941년 이래로 인구는 50%나 증가하여 1950년대 농업이 부양해야 할 인구는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민은 생계유지에도 부족한 너무나 영세한 농지를 소유한 상태였다.

1950년대 분단국가의 재건은 미국의 원조와 농민층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승만 정부는 전쟁 직전 농지개혁을 완료했다. 물론 개혁대상 농지 상당부분이 지주에 의해 농지개혁 시행 이전에 팔아 치워진 상태에서 진행된 개혁이 철저히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 하에서 일제 통치에 부응하며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누렸던 지주계급의 사실상 해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적지 않은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다시 농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시행된 농지개혁은 여전히 커다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국가의 농지개혁 방안은 영세농을 대량 만들어 내는 데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소규모 경지면적에 있기도 했지만, 땅을 소유하게 된 농민들이 그 대가로 엄청난 부담을 떠안았다는 점에도 있었다.

정부는 전쟁 당시 전시 재정의 안정과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1951년부터 현물로 임시토지수득세를 징수했고, 공정가격에 의한 양곡의 매상을 개

시하여 총 생산량의 1/3을 농민들로부터 강제로 사들였다. 그런데 이 모든 정책은 물가가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에서 시행되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당시 미국의 공정가격(1951~1955년)은 자유시장 가격의 절반에 불과했다. 게다가 농민들은 분배농지에 대한 대가를 정부에 현물로 상환해야만 했다. 땅을 소유하여 자작을 한다는 소작농의 평생소원이 이루어진 대가는 너무 가혹했던 것이다. 전시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현물로 거두어들이는 조세 수입액을 시장가로 환산하면, 당시 총 국세 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다.

과중하고 불공평한 조세 부담을 견디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농가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대다수 영세농들은 조세 부담, 지가상환 부담, 양곡매상의 부담 아래서 고리대 자본에 의존한 부채농이자 소작농으로 다시 전략해 갔다. 1956년 농업경제학자 김준보는 농촌을 답사한 후 그 실태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김준보, 1956. 9, 「최근의 농촌생태」 『재정』)

“부채 없는 농가는 거의 없으며 부채의 성격도 소비부채가 압도적이고, 생산을 위한 부채 비중은 작다. 국가의 영농자금 지원은 미미하고, 이를 대신하는 것은 고리부채가 대부분이다. 절량농가는 농촌 일반에 파급되어 있다. 영세농의 절량은 물론이고, 중농에 있어서도 식량 사정은 결코 윤택하지 않다. 상환미와 토지수득세는 농민에게 식생활을 보장하지 않을 만큼 현실적으로 과중하다. 절량의 보충의 길은 초근목피와 부채의 길밖에 없다.”

농민들의 부담은 국가에 직접 납부하는 조세 부담에 그치지 않았다. 농민들은 지역 행정관청과 관제 우익단체 등

에서 걷어가는 각종 부담금에 시달렸다. 수신통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은 지역에 따라서 많게는 일천 환이 넘었다. 전국적으로 농민들은 평균 310환의 금액을 지서운영비, 군경원호비, 반공청년단비, 대한부인회비 등으로 냈다.(『동아일보』 1953년 9월 8일자)

이와 같은 1950년대 농촌 상황의 열악함은 영세소농들이 농지를 매각하고 다시 소작농으로 전략하도록 만들거나 취업 조건이 크게 더 나은 것이 없음에도 도시로 떠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이 시기 농민들은 자식이 씩수가 보이면 무작정 도회지로 보내는 것을 상책으로 삼았다. 다음과 같은 언급은 당시 농촌과 도시의 우울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소위 지식청년이 도회지에서 직업 없이 우글우글 하고 다방이 초만원인 상황인 반면에 농촌의 본가(本家)는 파산상태로 돌아간다.”(조병문 : 민의원농림분과위원장, 1957. 7, 「농촌부흥과 중견청년의 이농방지책」)

1950년대 농촌을 희생하며 이승만 정권이 추진한 수입대체 공업화는 미국에서 과잉생산된 잉여물자의 원조를 기반으로 삼았다. 따라서 공장이 잘 돌아갈 것인가는 독점자본의 제대로 된 생산과 시장에서의 상품판매가 아니라 미국의 원조물자를 얼마나 배정받느냐에 달려 있었다. 원조물자를 배정받는 것 자체가 공정환율과 실세환율 사이의 차이로 말미암아 커다란 구매이득을 가져왔다. 또한 원조물자의 판매로 형성된 대충자금과 산업부흥국채 등의 방식으로 조성된 정부 보유자금이 소수의 자본가에게 저리로 융자되었다. 1950년대 원조물자에 의존한 경제구조는 미국 원조와 한국 정부의 정책에 잘 편승한 독점 대자본은 성장하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분야는 위축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자본을 축적한 것이 아니라 귀족재산의 불하, 미국의 원조, 정부의 각종 특혜에 기초하여 형성된 1950년대 독점 자본가층은 미국 원조당국 및 이승만 정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자연스럽게 정치자금의 주요 자금출 역할을 담당했다. 일례로 대표적 독점자본의 카르텔이라 할 수 있는 방직협회는 1953년부터 1961년 5월까지 8억 환을 집권세력에

게 정치자금으로 내놓았다.

반면 노동자의 삶은 열악함을 면치 못했다. 1950년대 노동자 가장의 수입은 가구 전체수입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노동자를 가장으로 둔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외의 가족들도 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57년에 101개 사업체의 37,909명의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사부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0,153환인데, 세대 당 생계비는 40,509환이었다. 임금이 생활비의 반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전후 실업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돈을 벌 의지가 있는 가족이라 해도 취업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도시 노동자의 삶은 빚을 지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안 되는 구조였다. 그렇다고 공장에서의 노동 강도나 근무조건이 좋을 리 만무했다. 1950년대 대표적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방직업에 종사하는 여공의 경우 하루 12시간의 가혹한 장시간 노동이 기본이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산업노동자로 취업할 기회가 적은 상황에서 농촌에서 꾸준히 유입되는 인구는 각종 서비스 업종에라도 취업하거나, 아니면 하루벌이로 생계를 유지했다. 가정부, 파출부와 같은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인구가 1960년 현재 13만 명이 넘었으며, 구두닦이는 3천 명이 넘었다. 그리고 완전 실업자로 분류되는 숫자만도 65만 명이 었다.

이렇게 볼 때 1950년대 한국 자본주의와 경제성장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성장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물론 노동자, 농민의 이해를 반영한 경제성장은 더욱 아니었다. 농촌의 희생을 전제로 원조당국 및 국가권력과의 밀착 관계

를 통해 성장한 자본주의는 매판적이며 파행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1950년대 미국의 원조물자에 의존하고 근로대중을 빈곤의 악순환에 가두며 성장한 경제성장은 사회 저변에서 두 가지 비판적인 인식이 확대되는데 기여했다. 하나는 부정부패의 근원으로서 경제성장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겠다는 바람이었다. 4·19 이후 표출된 ‘이권(利權)과 불로이득(不勞利得)을 추구하는 관권경제(官權經濟)의 타파’ 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이들은 ‘부패와 비능률을 일소하고 경쟁을 통한 창의와 근면에 의하여 생산자원의 최적배분을 보장하는 제도’ 로서 자유경제제도가 최선이라 보았다. 또 다른 생각은 미국의 원조가 자립경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이들은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고 한국을 철저히 시장으로 만드는 데 더 관심이 많다고 보았다.

그러나 1950년대 자유경제체제를 최선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미국 원조를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비판하는 대중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사회 대다수의 구성원이 지닌 기대는 민주당 정치인들마저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수탈 없는 경제’ 를 달성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주로 자유(방임)경제를 일부 제한하고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과 경제의 부정부패와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모든 구습과 인성을 타파할 정신헌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연결되었다.

사회문화 - 서구화 추종과 독재자 우상화

4·19 당시에는 3·15 부정 선거범을 엄벌하라는 요구보다 부정축재자를 엄벌하라는 요구가 더 높았다. 대중의 눈에 1950년대 사회는 비리와 특혜로 만연된 사회로 더 크게 인식되었던 것이다. 기업인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 장성, 교육자들 비리와 특혜로 부를 축적한 이들 중 상당수가 서구 문화를 모방하고 외제품으로 치장하며 사치스런 생활을 과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들의 행동은 여전히 전통적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큰 의미를 두고 있던 대중이 볼 때 분노와 불만의 대상이자 사회적 가치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존재로 비추어졌다.

미국 대중문화의 범람과 이에 대한 추종은 1950년대 사회를 특징짓는 현상 중에 하나였다. 1950년대 말, 한 지식인은 “모르는 사이에 아메리카니즘은 이 땅에 도입되어 깃들게 되었으니 상점에 나타나는 상품으로부터 관습, 제도, 사상에 이르기까지 아메리카니즘은 우리 생활의 부분”이 되었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네온사인, 파마, 패션쇼, 댄스홀의 유행에서부터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수여의 빈발, 여왕 대관식이 흔히 등장하는 대학축제 등등 미국식 생활양식은 미국에서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와는 상관없이 아메리카니즘에 대한 맹종 결과, 일상생활의 하나로 통합되었다.

전쟁과 함께 다시 대규모로 진주한 미군은 ‘GI 문화’라 불린 미국 대중문화의 주요 전파자였다. 1945년 이래 미군은 한때 민족 분단을 초래하는 ‘제국주의’ 점령군으로 비판받기도 했으나, 전쟁을 거치면서 물질적 풍요와 자유를 상징하는 존재로 더 크게 부각되었다. 전쟁 기간 동안 생계를 혼자 떠맡아야 했던 많은 전쟁미망인들이 미군을 상대로 매춘을 하여 생계를 유지했고 이러한 상황은 전쟁미망인들의 의도와는 별개로 성의 상품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했다. 미국 대중문화 맹종의 극단은 성의 상품화로 이어졌고, 사회의 다른 한편에서는 아메리카니즘이 한국 사회의 도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반발을 낳았다.

미국 문화의 확산은 영어 보급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었

다. 중학교에서 제 1 외국어로 영어가 채택되었고, 대기업의 공채시험 과목에도 영어가 선정되었다. 1950년대 학생들은 의무교육을 통해 한글교육을 제대로 받은 한글세대이자 동시에 영어공부에 매달리기 시작한 세대라 할 수 있다. 영어교육의 열풍은 영화 제목, 간판, 상품명 등에 영어가 넘쳐흐르게 하였다.

1950년대 한국 사회가 보인 이와 같은 문화현상은 한 사회학자의 지적처럼(이만갑, 1959, 「미국인의 가치 관념과 대중사회」 『사상계』) 대중의 형성이 본래의 가치 관념과 사회경제적인 토대 위에서 자발적인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외래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었다.

1950년대 한국 사회의 미국적 문화 추종은 현실적 조건이 미국 사회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아 능력에 넘치는 소비 욕구 발산으로 표출되었고 동시에 도시와 농촌 간의 생활양식의 분리를 심화시켰다.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적 괴리는 심지어 “한국의 도시인 중에는 외국인보다도 제나라 농촌 사람을 이방인으로 느끼고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더 늘어가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우려를 갖게 할 정도였다.

1950년대 한국 사회에서 표출된 아메리카니즘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미국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보인 반응으로, 이들은 주로 1950년대 한국 사회는 미국의 제대로 된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따라서 미국 문화의 참된 정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다른 반응은 미국 문화에 대한 맹종의 원인은 뿌리 깊은 사대주의에 있으며 전통적 가치의 올바른 복원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한편 전쟁 후에 이승만 정권이 행한 주요 문화활동은 집권자 이승만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었다. 1956년, 탑골공원과 남산에 이승만 동상이 만들어졌으며, 이승만과 관련된 전기와 영화가 제작되었다. 1950년대 정부는

대통령의 동정, 담화, 전기(경무대의 하루, 리 대통령 취임식, 리 대통령의 부석사 시찰, 독립협회와 '이승만', 우리 대통령) 등과 관련된 공보영화를 다수 제작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길이 한국으로 뻗어 있는 것과 같이, 삼천만의 ‘삶’을 위한 모든 길은 똑바로 대통령 각하에게로 집중되어 있다. 우리들의 영도자, 아니 민주진영 전체의 선구자이신 각하(중략) 각하께서는 조국이 곧 그의 가정이요, 한족 그것이 각하의 혈육일 뿐이다.”

전후 이상화 과정에서 이승만은 전쟁 기간 국민을 팽개치고 도피한 지도자가 아니라 구국의 선봉자이자 자유진영의 지도자이자 그리고 한민족을 하나의 가족으로서 품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부각되었다.

내무부는 지방 각 도 최말단 일선행정을 담당하던 동리(洞里) 반장 중 모범활동을 선발하여 서울 유람을 시키며 이들을 지방의 정부 지지기반 확대 및 이승만의 이상화에 활용했다. 서울 시찰단은 사흘 동안 국회의사당, 대법원, 반도호텔, 서울중앙방송국, 서울신문사, 공보실, 영화제작실, 원각사극장(고전무용, 창극 등 감상), 중앙의료원, 덕수궁, 국군묘지 참배, 영등포 태창방직공장, 인천 판초지공장, 만국공원(맥아더 장군 동상), 대한중공업공장, 대한극장에서 영화 관람, 내무부장관 인사, 경무대 예방, 민의원장 예방, 국산 박람회 관람, 수원 농사원 등을 시찰했다.

모범 반장들은 대통령 이승만을 만난 것을 매우 감명깊은 일로 언급했고 시찰에서 받은 감명을 면과 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을 다짐했다. 한 반장은 공보실 영화과에서 만든 <우리 대통령>이란 보도 영화를 ‘농촌 백성’들이 빠짐없이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농민

에게 이승만은 영도자의 수준을 넘어 백성을 통치하는 군주로까지 무의식중에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한편 정부는 선전매체로 영화를 적극 활용했다. 이동영화 상영은 라디오나 전기가 보급되지 않은 시골의 농민들에게 정부의 정책을 알리는 유용한 선전매체였다. 농촌에서 영화는 대단한 볼거리였다. 영화가 상영된다고 하면 멀리 떨어진 마을 사람들까지 와서 관람인들이 운집하였다. 또한 각 도청은 공보물을 발간하여 국가 행정지침과 도 행정지침을 주지시켰다.

1960년 초까지 대부분의 농촌은 ‘문화의 황무지’나 마찬가지였다. 신문을 구독하고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는 농민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소수 농가에 국한되었다. 일반 농촌에서 신문 구독자는 농민 1백 명 당 1명 꼴에 불과했다. 일반 농촌의 상황이 이러할진대 산골 벽촌의 상황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주목되는 사실은 이러한 여건에서 농민이 접한 영화는 미 공보원이 순회 상영한 영화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다. 1950년대 미 공보원 순회영화 상영 빈도와 관람자 수는 농림부, 문교부, 공보실 등 정부 기관의 영화 상영을 완전히 압도했다. 1959년 농림부의 농촌지역 순회영화 상영회수는 62회(관람자 약 32,500명), 문교부는 92회(174,030명)에 그쳤으나, 미 공보원 이동영화팀(21팀)의 상영회수는 7,001회(6,790,590명)에 달했다. 미국은 농촌 곳곳의 마을까지 파고들며 자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정치 - 헌정질서 파괴와 반공과 친미

정치인 중 전쟁특수를 가장 많이 누린 이는 이승만이였다. 전쟁 직전에 실시된 1950년 5·30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이승만 정권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크게 축소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5·30 선거 결과 조소앙, 장건상, 안재홍, 원세훈, 윤기섭 등 중도파의 주요 인사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

되었던 반면, 이승만의 친위인사들은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5·30 선거 결과는 대중이 분단정권 수립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이들보다 좌우합작과 남북협상을 통해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던 인사들을 분단국가가 수립된 뒤에도 여전히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쟁과 함께 김규식, 조소앙, 원세훈, 안재홍 등 좌우대립과 남북한 대립을 지양할 수 있는 논리와 역량을 소유한 이들이 대거 납북되었다. 이들의 활동과 지향을 지지하며 뽑아준 지지층도 극우 반공이데올로기와 학살이 자행되는 전시상황에서 무력화되었다. 전쟁 와중에 공산주의자들은 물론이고 분단정권 수립과 이승만 정권의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많은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이 피살당했다.

전쟁 직전에 정치적 수세에 몰려있던 이승만은 전쟁 덕분에 상당수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힘들이지 않고 제거할 수 있었다.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면서 집권유지를 위해서라면 자유 민주주의 헌정질서 자체를 파괴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승만은 국회의 간접선거 방식을 통해서도 대통령으로 재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자, 국회의원들을 검거, 협박하여 강제로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1952년 7월 4일)

1950년대 국가권력은 자신의 물질적 기반을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에 두고 있었다. 이승만 정권은 동북아 반공 보루를 지키려는 확고한 자세를 보여주고 반공이데올로기를 강력히 주창하며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한국에서 정권이 새로 수립될 때 미국이 신정부를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부 수립 과정과 상

관없다. 미국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이해를 달성하는 데 유익한 정권인가 하는 것이었다. 물론 미국의 대외정책 입안자들은 독재정권을 혐오했는데 이는 독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약화시키고 공산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면 독재정권이 미국에 적대적이지 않고 이해추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 독재정권인가 민주정권인가는 부차적인 문제였다. 냉전이 고조된 1950년대 전반 미국의 원칙은 공산진영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데 있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이승만 정권은 억압적인 국가기구의 확대·강화 그리고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뒷받침하는 반공이데올로기의 전횡을 통해서 반공 보루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존재임을 과시했던 것이다.

이승만 정권은 종전문제에서부터 전후 미국의 대한 군사·경제정책 및 동북아 재편 정책을 놓고 끊임없이 미국과 마찰을 일으켰다. 전후 미국은 이승만의 북진통일에 반대했다. 이는 미국이 평화통일을 선호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난 어떠한 독자적인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통일은 미국의 이해가 관철되는 방식으로만 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또한 아시아 반공연대의 맹주가 되고자 하는 이승만에게 미국은 일본 중심의 동북아 질서 재편 구도를 따를 것을 요구했다. 이승만 정권의 ‘반공의식 고취’도 미국은 탐탁하지 않게 여겼다. 이미 전쟁을 겪으며 한국 사회는 충분히 반공의식이 고취되었다고 판단했고 자칫 이는 이승만의 호전적인 북진통일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1950년대 내내 미국과 이승만은 마찰했고 때로는 미국이 이승만 제거계획을 심각하게 검토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치달았다. 그러나 미국이 마지막 카드를 끝까지 꺼내지 않았던 이유는 주권국가의 통수권자를 자의적으로 교체할 때 초래되는 위험과 함께 미국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둘 정도로 이승만이 반공이라는 하한선을 넘지 않았다는 데 있었을 것이다.

1950년대 한국 정치의 전개는 권력을 장악한 자유당과 정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야당 간에 치열한 대결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반공 친미를 선명히 표명하는 세력들만이 운신할 수 있는 극히 협소한 정치공간이었다. 이 정치공간은 미국의 이해추구에 순응하고 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보수 세력이나 친일경력자, 반공주의자가 주도하는 곳이었다. 반공 친미, 북진통일 노선에서 이탈하는 정치세력은 '합법적'인 정치공간에서 버티어 내기가 힘들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정질서 자체를 무시하는 모습이 반복되며 이승만은 대중의 자발적 지지를 급격히 상실해 갔다. 그럴수록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정권을 지속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대중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갔다.

1950년부터 1960년 사이에 이승만과 그 추종자들은 정권유지가 위기에 부딪칠 때마다 위로부터 대중을 동원해 관제데모를 대대적으로 펼쳤다.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시 수도 부산에서는 백골단, 땃벌떼 등의 폭력단체와 이승만이 총재로 있는 대한청년단, 국민회 등이 관제데모를 벌였다. 1954년 '사사오입'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종신 집권을 위한 개헌을 이룬 후, 1956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대중의 요망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우마차 시위를 벌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승만 정권이 대중동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었던 까닭은 정부수립 직후부터 시민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싹을 자르며 제반 사회단체를 관변단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국적 규모를 갖춘 노동자, 농민, 여성, 학생조직(대한농총,

대한농총, 대한부인회, 학도호국단 등)의 총재 또는 명예총재는 모두 이승만이었다.

한편 이승만 정권은 국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자 대민 말단 행정기구를 확대했다. 이승만 정권은 1952년부터 동(洞)·리(里) 밑에 국민반이란 국가행정 말단 조직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다. 국민반의 반장은 이장을 보조하며 국가의 병무, 징세, 노무, 군경원호, 생산증강 등을 실제 책임지는 국가의 말단 행정요원이었다. 내무부는 매달 반장(당시에는 방장(坊長)으로 불리었다)으로 하여금 반례회를 개최하여 반원들에 대한 통솔, 동원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승만 정부는 국민반의 조직 초기 20호 내지 30호 규모를 1950년대 후반에 15호로 개편·강화했다. 그 결과 국민반 반례회 출석률은 현저히 높아졌다. 경상북도의 경우는 개최율 96%, 참석률 80%라는 수치를 보일 정도였다.

국가권력의 침투 정도는 인구이동과 사회변동이 많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정적이며 대중 정보매체를 거의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농촌에서 훨씬 강할 수밖에 없었다. 1950년대 농촌의 실태는 관료를 중심으로 하는 몇몇 특권층들이 농민과 농촌단체를 지배하며 민주발전의 토대가 될 자주정신이 증대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농촌문제 전문가는 한국 농촌사회의 첫 번째 특질로 '농민을 위한 민주사회가 아니고 관료와 특권층이 지배하는 관료사회인 점에 있다.'고 통박했다.(주석균, 1960. 4, 「농촌지역사회의 구조-그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지역사회개발』 1호)

국가와 농민 간의 관계에서 볼 때 이승만 정권 이후 농민 앞에 열린 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지배와 간섭을 제일로 여기는 관료정치가 농촌에서 일소되어 '농민의 힘'으로 농촌을 재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관료들이 농민과 농촌단체를 지배, 간섭하여 농민들의 민주사회 건설 의지를 지속적으로 억누르고 농민들을 지속적으로 관의 지도와 보조에만 의존하도록 만드는 길이었다. 5·16군사쿠데타 세력들은 전자보다 후자의 관점에서 농촌의 개발을 모색했다.

희망 -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에 대한 갈망

전쟁을 겪고 무소불위의 반공이데올로기와 국가권력의 폭력이 맹위를 떨치는 사회에서 대중이 정치의식을 고양시켜 가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전후 1950년대 진행된 도시화와 교육은 대중의 정치의식 강화에 일조한 사회적 요인들이었다. 1945년 이래로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내용을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현실 정치제도가 이상적 형태로 학습한 것과 얼마나 다른 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주었다. 한편, 도시는 정부 공보매체가 아닌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널리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대중에게 제공했다. 정치적 각성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농촌보다 도시가 훨씬 많았던 것이다. 도시지역에서 자유당의 정치적 지지기반은 야당인 민주당에 비해 현저히 뒤졌다.

이승만과 자유당이 장기집권을 위해 더욱더 비민주적으로 되어갈수록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갈망하는 것은 당연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승만과 자유당은 민심이 자신들을 떠났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감은 지방자치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을 거치면서 거듭 확인되었다. 1956년 8월에 실시된 시·읍·면장과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에서 시의원의 경우는 자유당 당선자보다 무소속과 민주당 당선자가 더 많았다. 또한 읍의원의 경우에도 자유당 510명에 비하여 무소속 319명, 민주당 57명으로 무소속이나 민주당 후보의 당선률이 1952년보다 크게 상승되

었다. 1958년의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중은 자신의 뜻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자유당은 이 선거에서 126석을 차지해 의석수에서 분명한 우위를 점했으나 실득표수는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민심이 떠난 정치세력이 권력 장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언론 통제, 국가보안법 개정, 경찰력 동원과 같은 권위주의적이며 억압적인 수단밖에 없었다. 결국 권력욕의 화신이 된 이승만과 자유당 강경파들은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하고자 행정력과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눈뜨장님이 아닌 이상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과 함께 1950년대 한국 사회가 보여준 또 다른 희망의 싹은 민족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북진통일론’과 ‘반일민족주의’를 지배이데올로기로 활용하며 대내외 민족문제에 대처해 나갔다. 그런데 1954년 이승만의 사사오입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 시도는 반공 친미를 천명한 집권세력 내에서까지 강한 갈등을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의 교체를 바라는 세력이 형성되었고 여기에는 자유당 탈당파와 야당세력, 그밖에 원외에 존재하던 광범한 반 이승만 정치세력이 망라되었다. 이 와중에 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조봉암은 ‘책임정치의 실현’과 ‘수탈 없는 경제체제의 실현’ 그리고 ‘평화적 통일 성취’를 제시하며 야당 대통합을 주창했다.

비록 보수반공에 집착한 정치세력에 의해 비록 야당 대통합에는 실패하고 독자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조봉암은 1950년대 대중이 간직하고 있던 바람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다.

1956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은 216만 표를 얻어 이승만의 504만 표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조봉암은 전체 유효득표수의 30% 이상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전북의 전주, 전남의 목포, 경북의 대구·경주·달성·영천·경산 그리고 경남의 진주·충무·진해·진양·창녕·양산·고성 등 지에서는 압도적으로 최다 득표자가 되었다. 선거 결과에 대해 진보당은 “득표에 이기고 개표에 졌다”고 논평했다.

조봉암과 진보당은 평화통일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즉 남북한 대표로 구성되는 전 한국위원회와 인도·스위스·체코 대표로 구성되는 국제 감시위원회의 감시 아래 남북한이 동등한 지위에서 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승만 정권이 북진멸공통일을 강력히 주창했음에도 조봉암이 많은 표를 얻었다는 것은 대중이 평화적인 통일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전쟁을 겪은 뒤에 집권세력은 증오심을 고조시키는 데 치중했지만, 전쟁의 상처를 온몸으로 체험한 대중은 평화적인 통일이 남북이 취해야 할 정도임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2022~~

4·19, 민주주의 혁명인가?

정창현

끝나지 않은 4·19 성격 논쟁

1960년의 4·19는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해 일어난 민중의 민주항쟁이었고, 6·25전쟁 후 본격적인 민주화운동의 첫 출발점이었다. 또한 4·19는 식민지 민족해방운동과 해방 직후 자주적 통일민족국가 수립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4·19는 이승만 정권의 몰락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왔으나, 주도세력의 미형성과 이념부재로 진정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완성에는 실패하였다. 특히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1961년 5·16군사쿠데타는 4·19의 완성을 좌절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19의 '미완'은 이후 한국 현대사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묻어둔 채 군사독재체제를 경험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특히 독재정권은 붕괴시켰지만 '미완'이었다는 점에

정창현 _ (사)현대사연구소 소장/국민대 겸임교수, khistory@dreamwiz.com